



국민연금 적정성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2015.6.19 |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이나 재정계산 과정은 애초 설계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다'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들이었다. 국민연금이 본래 목적인 노후의 생활보장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사라지고 소득대체율만 축소되어왔다. 이제부터라도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성 논의를 노인의 현실에 기초해 시작해보기를 제안한다.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다. 향후 45년 후 노후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날 테고, 후세대가 이를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다른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p 올리자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었다. 공무원연금 실무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를 패키지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연금 고갈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찌됐든 힘겨루기 과정을 거치면서 5월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공무원연금법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를 두고 절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단서조항이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올 10월까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핵심 과제는 노후의 적정 연금 수준을 밝히는 일이다. 정부가 쌍수를 들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데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따른 기금 고갈의 우려에서다. 앞서 예측되는 어려움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을 노후생활 보장 기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도 동시에 고려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 본래의 의미는 지난 개혁과정에서 봐왔듯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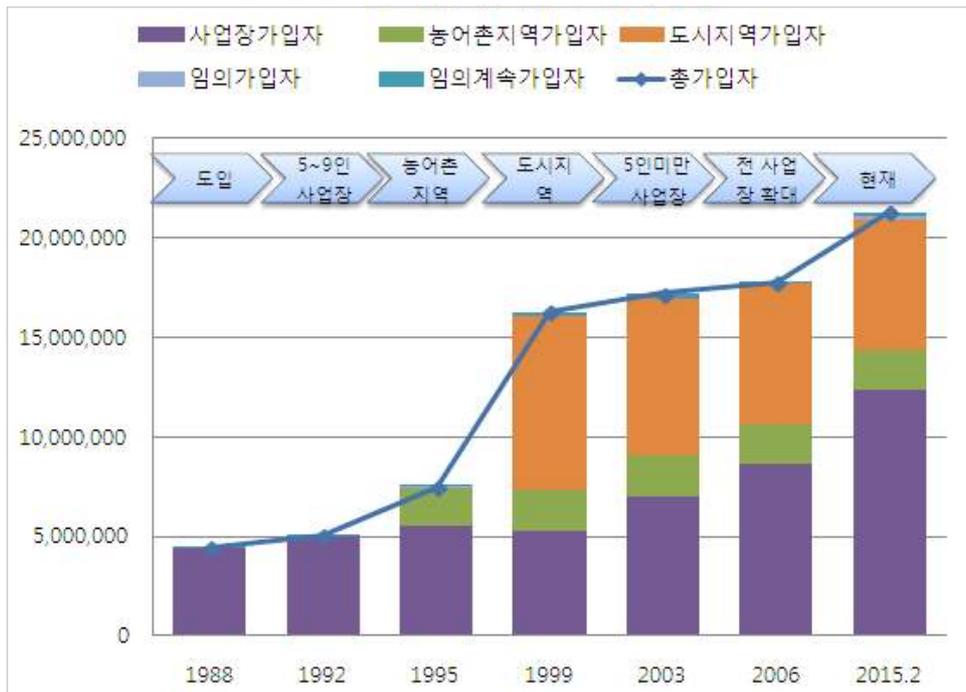


연금개혁 ‘재정 안정성’에 집중, ‘사각지대’ 논의 후퇴

국민연금이 단기간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연금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기여형 연금이긴 하나, 낸 돈보다 후대에 더 받게끔 설계되었다는 점에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분배’는 물론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높아 ‘세대 내 분배’ 기능도 높은 명실상부한 공적연금으로 자리하고 있다. 1988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은 올해로 27년을 맞이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공적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면서, 2015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23만8612명이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에는 443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2년에 5~9인 사업장 적용으로 확대되면서 502만 명으로 증가했다. 1995년 농어촌지역으로 가입으로 확대되면서 749만 명에 이르렀고, 1999년 도시지역 적용되면서 1,626만 명으로 급증했다.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1718만 명, 2006년 전 사업장 적용으로 확대되면서 1773만 명으로 늘어나 현재의 규모에 이르렀다(그림1 참고).

그림1. 국민연금 총가입자 주요 추이



출처: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표통계(안)”, 2015.4 참고 재구성.

주: 사업장가입자는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연금의 재정 불안은 주요 화두였다. 도입 초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에 주안 한 듯 했으나, 이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집중되었다(표1 참고).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구성되면서 1998년 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모색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어촌지역으로 연금이 확대된 이후 도시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와 국민연금 도입 10년을 맞으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가 관건이었다.

1998년 1차 제도개혁에서 주요 과제는 자영인 등으로 확대하는데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 재정불안을 해소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현행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며, 지급연령을 65세로 조정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적자 시점을 2036년으로, 기금소진시점도 2047년으로 연장했다는 자평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전망할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2003년 처음 시작되었다. 1차 재정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중점이었다. 이에 발전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 15.9%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고, 도시지역으로 확대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등 제도보완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안 없이 재정안정화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2007년 2차 제도개혁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전에 제안된 사각지대 해소 제안에다 덧붙여 기초노령연금(노인의 70%, 급여수준 A값의 5%, 2028년까지 10%로 인상) 도입하면서,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에 따라 재정수지적자시점을 2044년으로, 기금소진년도를 2060년으로 연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도 2차 때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¹⁾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라당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제안했다. 이는 65세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A값)과 연동해 5%로 지급할 것으로 설계되었고, 장기적으로 10%로 올리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에 폐지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과 연계해 단계

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2013.3



적으로 올리기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은 사라지고, 낮은 물가인상과 연계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애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공적연금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후퇴된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표1. 국민연금 개혁 과정 요약

구분	1998년	2003년	2007년
	제1차 제도개혁	제1차 재정계산	제2차 제도개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과제는 자영인 등 도시 주민으로 확대 적절한 제도, 기금 및 재정불안 5년마다 연금재정 전망할 재정계산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계산 첫 시작 1차 재정계산 어떤 재정 상태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가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쟁점인 사각지대 문제
논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비례연금을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전환, 보험료율 12.65%로 인상(2020년까지), 급여수준 40%로 인하, 지급개시연령 65세로 늦춰(2033년까지) 등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70년경 기금적립배율 2배 유지를 재정목표로 합의 재정안정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전가입자평균 소득월액(A값)의 5%를 65세 노인의 70%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결론 급여수준은 40%로 더 축소
결과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 결정 급여수준 60%로 하향조정, 보험료율 9% 유지, 지급연령 65세로 단계적 조정 재정수지적자시점 2023→2036, 기금소진시점 2033→2047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위는 소득대체율 60%→50%로 인하, 보험료율 15.9%로 인상,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등 제도보완 제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안 없이 재정안정화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기간 교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대체율 60%→40%로 인하, 보험료율 현행 9% 유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보완 안에 더해서, 기초노령연금(노인의 70%, 급여수준 A값의 5%) 도입 재정수지적자시점 2036→2044년, 기금소진년도 2047→2060년으로 연장

출처: 이용하, “제3차 재정계산(2013)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추진방향”, 한국응용경제학회, 2012 정리

국민연금 둘러싼 최근 쟁점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18~59세 전체 인구 2262만 명 중 절반만이 노후에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



구의 68.6%이며, 공적연금 적용자는 66.9%로 특수직역연금 142만명(4.3%)과 국민연금 적용대상 2062만명(62.6%) 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1498만명으로 4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경제활동인구 1034만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7만명,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06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50.2%다. 다시 말해 국민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그림 2 참고).

그림2. 국민연금 가입실태

18~59세 총인구 32972천명(100)					
경제활동인구 22627천명(68.6)					
공적연금 적용자 22050천명(66.9)					
비경제활동인구 10345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77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628천명(62.6)			특수직역연금 1422천명(4.3)
		납부예외자 4575천명	소득신고자 16053천명(48.7)		
			장기체납자 1065천명	보험료 납부자 14988천명	
			31.4	1.7	
16562천명			16410천명		

출처: 국민연금, “2013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4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왔다. 끊임없이 제안된 해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납부예외 사유 축소 등이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한계에도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과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금의 기초연금을 손보자는 제안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노인에게 주도록 보편성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지급액도 높여가자는 논의가 한 축의 대안이다.²⁾

지금까지 제도개혁 과정에서 재정을 탄탄히 가져가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안들은 많았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다. 과거 논의에서는 연금의 소득

2) <오마이뉴스>, “어설픈 연금정치가 국민 현혹... 해법은 기초연금 강화”, 2015.5.11.



대체율을 60%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9.85%까지 인상, 50%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은 15.85%까지 인상, 40%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11.85%까지 인상하는 방안들이 제안되었다.³⁾ 현행 보험료율 9%보다 3%~11%p는 더 올라야 연금의 급여수준 인상이 가능하다는 설계다. 다시 말해 현재 200만원 월급자가 매달 9만원 내던 보험료에서 3만원에서 11만원은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막상 보험료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장은 이에 대한 저항감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95만 5000원 미만 소득 가입자가 전체의 14.2%이며, 95만 5000원에서 151만 5000원 소득구간 내 가입자가 31.1%나 된다(그림3 참조). 영세자영업인이나 저임금 층에서 노후 준비에 더 돈을 쓰는 데 당장의 생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이들의 연금 이탈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림3.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구간별 비중 현황



출처: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표통계(안)”, 2015.4 참고 재구성

그러나 최근 정부와 최전선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김 교수가 보건복지부에 소득대체율을 10%p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뢰한 결과 보험료율 1% 인상만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물론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전제했을 때다. 김 교수 역시 이 시점부터는 보험료율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긴 하나, 정부의 입장처럼 2100년을 내다보고 기금을 적립해 나온 보험료율 18.85%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⁴⁾

3) 이용하 재인용,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08

4) 김연명,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2015.5.12.



적정 연금, 노후 최소 생활은 보장해야

현재 실제 받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인가? 현행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 경우 200만원 소득자는 40년간 연금을 낼 경우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4년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어 실질소득대체율은 48만원에 불과하다(표2 참고).

표2.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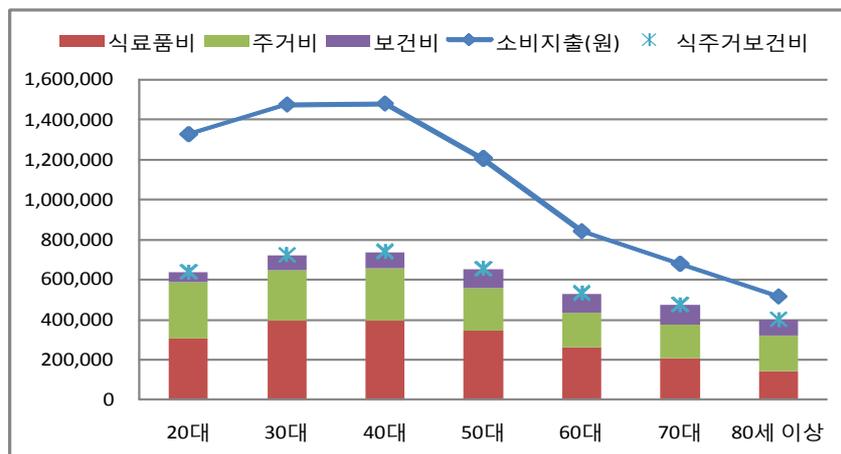
	소득대체율 40%	소득대체율 50%
명목소득대체율 적용 (40년 가입시)	80만원	100만원
실질소득대체율적용 (평균가입기간 24년 적용)	48만원	60만원

출처: 김연명, “연금개혁 키워드 ‘50’ 과 ‘20’ 의 쟁점과 방향, 2015.5.12. 재인용.

주: 생애평균소득 B값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A값(200만원)과 같은 평균소득자 기준(2015년)

그럼 이 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의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새사연 이슈진단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2015.6.15.)에서 노인 세대의 소비지출을 계산해 분석해보았다. 실제 받는 국민연금 48만원으로는 현재 노인 세대의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60대 1인가구의 소비지출비는 총 84만원이다. 이들의 기본 생활비인 식료품에 26만 3863원, 주거에 17만 2870원, 보건에 9만3940원을 지출해, 식주거보건비에 총 53만 673원이 소요된다. 이는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48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인데다, 60대 1인 가구 소비지출의 57%밖에 감당하지 못해 그 한계가 명확하다(그림4 참고).

그림4. 연령대별 소비지출(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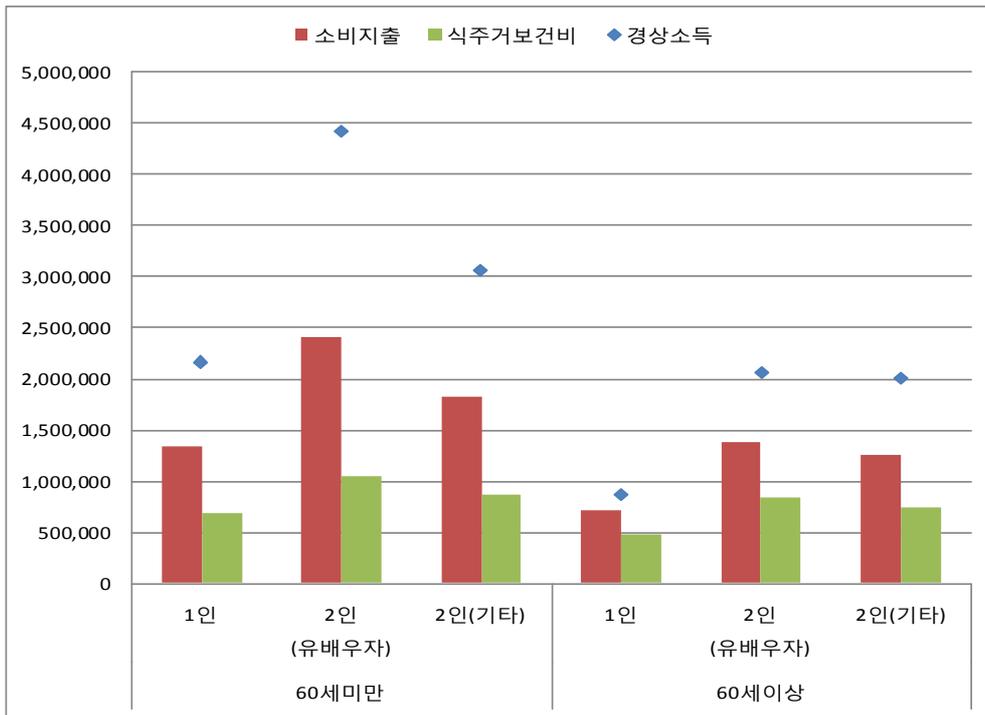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로 분석한 이정아,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새사연 이슈진단, 2015.6.16.



연령대를 60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 나눠 가구형태별로 소득과 지출도 비교해봤다. 한 눈에 보기에 60세 이상은 60세 미만 세대와는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경상소득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 있다. 60세 미만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216만원 1597원인데 반해, 60세 이상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88만 39원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서도 60세 미만과 이상 세대들 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60세 미만의 1인가구의 총 소비지출비는 134만 7125원으로 소득 대비 62.3%인데 반해, 60세 이상의 총 소비지출비는 70만 9094원으로 소득 대비 80.6%에 달한다. 소득 대비 식주거보전비를 비교해보면, 60세 미만의 1인가구는 68만 6247원을 지출해 소득 대비해 31.7%를 쓰는데 반해, 60세 이상의 1인가구는 식주거보전비에 총 48만 1816원을 써 소득 대비 54.7%를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가구형태별로 차이는 있지만, 60세 이상 세대들은 경상소득 자체가 낮다보니 지출 비중이 높고, 이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비인 식주거보전비 비중이 높다. 60세 이상 세대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 이외의 지출 여력이 현저히 낮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그림5 참고)

그림5. 가구형태별 소득과 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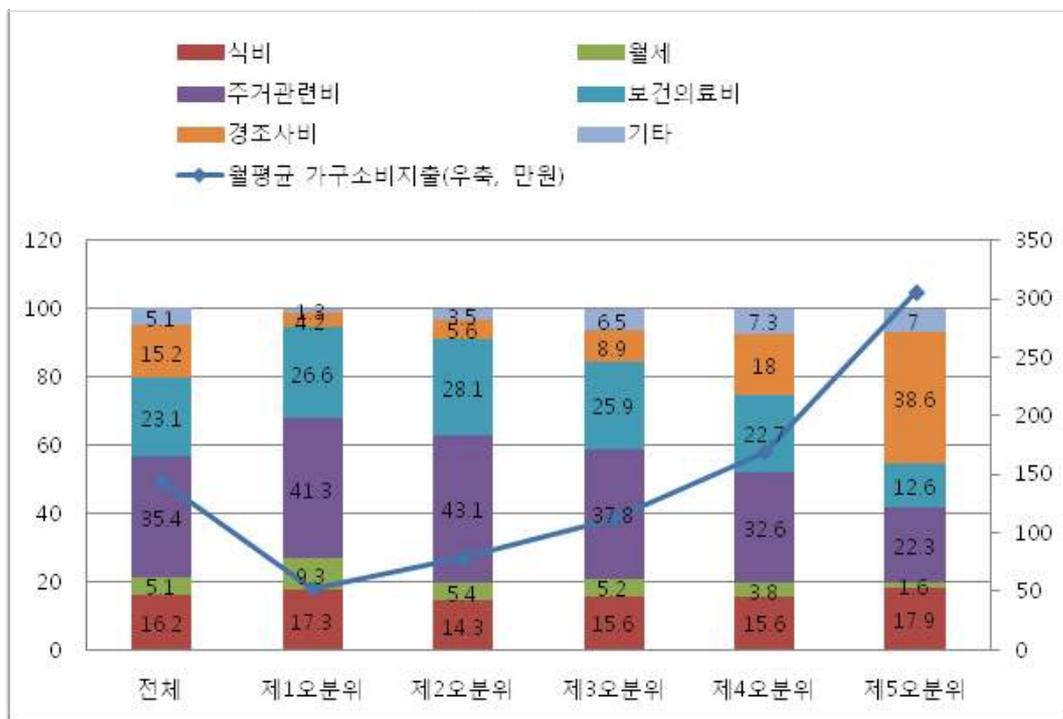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로 분석한 이정아,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새사연 이슈진단, 2015.6.16.



2014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기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노인의 월 평균 가구소비지출은 143만 9000원인데, 식주거보건비에 114만 8000원을 지출해 이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의 8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소득 1분위,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비지출비가 각각 52만 1000원, 78만 6000원인데, 이들의 식주거보건비는 49만 2000원과 71만 4000원으로 비중이 각각 94.5%, 90.9%에 이른다. 즉, 현 국민연금은 소득 1, 2분위 노인세대의 기본생계비도 책임질 수 없는 공적연금인 셈이다(그림6 참고).

그림6. 노인(65세이상)의 월 평균 가구소비지출과 지출항목별 비중 (단위: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

노후 소득의 자원에는 일자리나 모아둔 자산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이를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적정성 논의에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노인의 소비지출을 중심에 놓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적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시작하는 게 타당하다. 새사연은 성인1인의 최저생활비용으로 144만 1996원을 계산해냈다. 이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온 노인 전체의 월평균 가구소비지출비 실태조사 결과와도 매우 근접해, 노인 세대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수준에도 부합한다.



표3. 성인1인의 최저생활비용

	성인1인 (핵심연령대 만25~54세)
식료품비	348,113
주거비	541,038
보건의료비	101,259
양육비	0
교통비	116,836
조세	102,675
기타	232,075
최저생활비용	1,441,996
시간급 환산 (주 40시간 전일제 기준)	6,914

출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2015.4.21.

주: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MIT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임금가구의 생활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응용 설계한 모형(Basic Needs Budget)에 기반해 적정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 추산.

이제까지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은 태생적인 한계처럼 지적되어왔다. ‘적게 내고 더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은 고령화저출산 추세대로라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국민연금 탄생 이후 27년간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아 왔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제도개혁이나 재정계산 과정은 애초 설계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다’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이었다. 이때마다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권 내 파장은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다’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재정 불안이 속 시원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정작 중요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버리기만 했다. 국민연금이 본래 목적인 노후의 생활보장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사라지고 소득대체율만 축소되어왔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노인 빈곤을 멈추기 위한 적정선,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선 논의를 노인의 현실에 기초해 시작해보기를 제안한다.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6월 19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 인구기초통계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